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관세) 미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 및 현지 반응 2
-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경제·통상 합의 도출...히토류·보복관세·공급망 대책 전면 타결

📊 경제통상 동향

- (IEEPA) 트럼프 관세권한 대법원 판결 전망...대법원 '중대 질문' 판결 주목 4
- (관세) 美, 중·대형 차량·부품·버스 232조 관세 적용 및 신고 지침 발표 5
- (규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집행 강화로 대중(對中) 수입통제 확대 6

⚖️ 의회법안 동향

- 수출 통제, 무역 관세 및 의약품 등 총 8건 7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8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9

📅 워싱턴 D.C. 주요일정

11.5(수)	• 10월 S&P 글로벌 미국 서비스 PMI(최종치)(S&P final U.S. services PMI)
11.6(목)	• 11월 1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Initial jobless claims) • 연준(Fed) 부의장 Michael Barr 연설(Fed governor Michael Barr speech)
11.7(금)	• 10월 미 실업률(U.S. unemployment rate)

(통상) 미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 및 현지 반응

1. 개 요

□ 미중 정상회담 개요 및 주요 내용

-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경제·통상 합의 공식 발표 (11.1)
- 미중 정상 간 주요 합의로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통제 완화, 미중 관세 인하, 공급망과 외환시장 안정, 농산물 등 주요 품목 시장 확대 등 포괄적 협력
-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에 실질적 평화와 경제적 성공을 안겨줄 합의”라고 평가, 중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실무기업 지원” 약속을 공식화

〈미중 양국 간 주요 합의 및 조치 내용〉

구분	미국 측 조치	중국 측 조치
관세 인하	대중 관세율 10%p 인하(2025.11.10부터), 상호 관세 10% 유지·1년간 추가 인상 보류	2025.3.4 이후 발표한 농산물 등 주요 품목 대미 보복관세 전면 중단·철회
관세 유예	301조 관세유예(2025.11.29→2026.11.10까지 연장), 해운·조선 부문* 조치 1년간 유예 * 중국 상선 대상 입항료 포함 1년간 유예	미국산 품목별 시장기반 관세면제(최대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수입규제 정책 철회
수출통제	주요 end-user control 및 수출통제 규정 1년간 시행 중지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2025년 10월 이후 수출통제 철회·일반라이선스 발급
공급망	한국·일본 등과 미 해운·공급망 협력 강화, 중국과 301조 공급망 협상 지속	Nexperia 등美계 반도체 기업 생산라인 정상화 보장, 반도체 공급망 반덤핑·반독점 조사 종료
농산물 등 교역	특정 품목(대두 등)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 농산물·자원 품목의 시장 진입 개선	2025년 하반기 미국산 대두 1,200만t, 2026~28년 연 2,500만t 추가 구매. 소맥, 목재, 수수, 축산물 등 대량 수입재
마약·화학물질	마약류(특히 펜타닐) 차단 관련 중국과 협력, 미국 내 규제 정책 유지	펜타닐·전구체 수출유입 차단, 특정 화학물질 수출 엄격통제
기타	미국 내 대중 정책(조사제재 등) 일부 1년간 유예, 추가 무역협상 예고	美기업 end-user·신뢰불가 명단 등 보복성 비관세조치 해제, 대미 제재·조사 등 중단

[자료] 백악관 팩트시트 및 언론 보도자료 종합

2. 상 세

□ 주요 합의 세부내용

- 2025년 3월 이후 부과된 상호 보복성 관세 및 비관세조치 대부분 철회
 - 양국은 상대국에 부과한 보복성 관세 및 비관세조치 대부분*을 상호 철회하고, 미국은 일부 제품 대중 관세를 추가 인하(10%p), 주요 301조 조치는 1년간 유예
 - * 구체적인 품목이나 사례별로 일정 기간 유예 혹은 추가 협상이 필요한 조치는 남아 있음
 -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13종 보복관세를 전면 철폐, 에너지 및 기술 제품 수입 확대
 - 미국은 중국산 광물, 배터리, 반도체, 제약 등 핵심 부품 공급망 안정성 보장과 동시에, 기존에 부과한 일부 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병행하기로 함
 - 특히, 해운·조선 분야에서 부과했던 상호 항만 사용료(fee)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분야의 무역 장벽을 크게 낮추고 투명한 무역 환경 구축 기대
- 중국은 희토류·갈륨·게르마늄·흑연·안티몬 등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해제, 일반 라이선스를 발급해 공급망의 부품·배터리·반도체 원소 수출 정상화
 - 네스페리아(Nexperia) 등 유럽·미국계 반도체 기업의 생산 및 수출 제한 해소, 대상 기업의 엔티티 제재 철회와 반독점·반덤핑 조사 종료
 - 양국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소재 등 주요 산업의 기술·산업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합의

□ 현지 반응 및 전망

- 미중 갈등 완화와 불확실성 축소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반면 구조적 문제 해결이 미흡한 임시 조치라는 지적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존재
 - 미국 농업계,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관련 업계는 공급망 복원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
 - 양국 간 글로벌 거래와 소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실무협의 및 분야별 후속 협상이 이어질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백악관(11.1), CFR (10.31), 인사이드(11.1), BBC (11.3)

(IEEPA) 트럼프 관세 부과 권한 대법원 판결 전망...대법원 '중대 질문' 판결 주목

• (개요) 대법원, 트럼프 관세 부과 권한 심리 및 영향

-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진한 대규모 관세 부과 정책의 법적 효력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오는 11월 5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
 - *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총 4천억 달러 규모)을 제동한 사례에서 적용된 '중대질문(Major Questions) 원칙'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 현지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의 무역 및 비상경제정책 권한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자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로이터)

• (상세) 대법원 심리 앞둔 하급심 판결 및 주요 법률 쟁점 집중 조명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IEEPA 등 복수의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었으며, 대법원 심리에서는 관세 부과의 합법성, 의회의 권한 위임 범위, 그리고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
-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위헌이라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으며, IEEPA가 대통령 수입 규제 권한만 부여할 뿐, 포괄적인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
- 정부 당국자들은 대법원이 관세 전면 차단보다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예상하며 법 절차 존중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10%~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통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 중소기업 및 수입업체들은 관세 유지로 인한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정부는 판결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에 집중
-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권한 분리를 둘러싼 헌법적 경계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James Lee
■ 자료원	AP (11.3), 로이터(11.3)

(관세) 美, 중·대형 차량·부품·버스 232조 관세 적용 및 신고 지침 발표

- (개요) CBP, 자동차부품 대상 232조 관세 진행 절차 및 신고 체계 확정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중·대형 차량(MHDV), 중·대형 차량 부품(MHDVP), 버스 및 기타 차량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추가 관세 부과 및 신고 지침 발표(10.31)
 - 동 조치는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25.3월) ▲상계 제도 도입('25.4월) ▲대상 확대('25.10월) 후속 조치로, '25.11.3일부터 ACE 시스템을 통해 관세 신고·집행 본격화 예정
 - (상세) 품목별 232조 관세 적용 범위·세율 및 통관·신고 절차 강화
 - (완성차) ▲중·대형 상용차(MHDV, HTS 8701·8704·8705·8706·8709) 25% ▲버스(HTS 8702) 10% 부과, ▲제조 후 25년 경과 차량(빈티지 차량)은 관세 면제 부여
 - (부품) ▲관세법 주(註) 38 Subchapter(i) 열거 MHDV 부품에 25% ▲USMCA 원산지 요건 충족 시 0% ▲미국 내 생산·수리용 인정 시 예외 부여 등 조건별 차등 적용
 - (국가별) EU·일본은 기본세율(Column 1) 15%를 기준으로 0% 또는 15% 차등 적용, 영국 10%, 기타 국가는 25% 일률 적용 등 동맹·FTA 기반 차등 관세 체계 운영
 - (신고 방식) 미 통합관세표(HTSUS) 제99장 우선 신고 후 본 품목(Ch.1~97) 세율을 병기 또는 면제(0%) 처리하며, 비(非)미국산 콘텐츠 상계* 적용 시 상무부 승인 요구
 - * 상계(Import Adjustment Offset): 상무부 승인 범위 내 232조 관세 조정·환급 허용 제도
 - (관세 연계 면제) 상계번호 제출 시 232조(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 관세와 IEEPA·상호관세·캐나다·멕시코·브라질·러시아산 원유·인도 추가 관세 중 일부 면제 적용
- ※ 세부 지침 및 코드 목록은 CBP 시스템 포털(<https://www.cbp.gov>)에서 확인 가능
- (반응) 산업계, 관세 부과에 따른 통관 리스크 및 공급망 비용 상승 우려
 - 관련 업계는 국가별 차등관세 및 미국산 콘텐츠 증빙·용도 인증 요건 강화로 통관 부담 및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초기 ACE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오류·지연 가능성 우려
 - 물류·공급망 분야는 추가 관세의 소비자가격 전가 및 수요 둔화 가능성, 미국 외국 무역구역(FTZ)·환급제도 제한에 따른 재고·운영 부담 및 물류 지연 가능성 제기

▪ 작성자 | 워싱턴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 CBP([10.31](#)), International Trade Today([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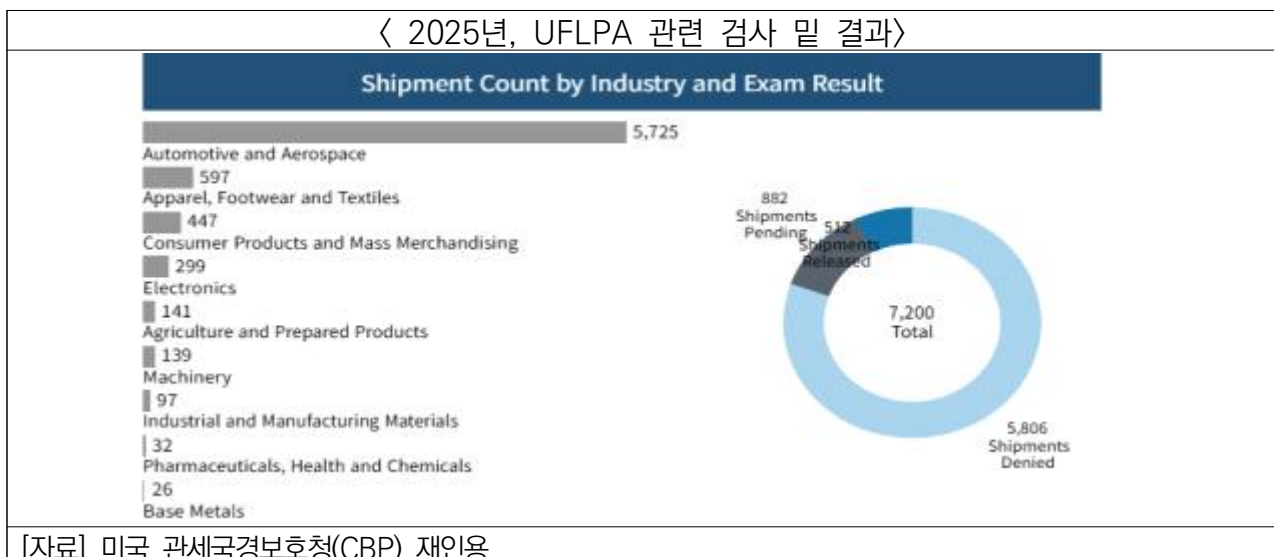
(규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집행 강화로 대중(對中) 수입통제 확대

• (개요) 미 CBP, 강제노동 차단 기조 강화 및 주요 산업 공급망 점검 확대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5년 1~9월 중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결과, 총 5,806건(5,560만 달러 상당)의 수입 화물이 미국에 입국 거부된 것으로 발표
* '25년 1~9월 제재 건수는 '24년 1,977건(2.4억 달러), '23년 1,854건(3.6억 달러) 대비 증가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5년 들어 CBP의 강제노동 집행 강도가 지속 상향되면서, 고위험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반입 차단 규모 급증

• (상세) 자동차·항공우주 중심의 단속 급증 및 공급망 검증 강화 추진

- UFLPA 제재목록(Entity List)에는 중국 전역의 144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기계·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제재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
- 전체 적발의 약 98%에 해당하는 5,725건이 자동차·항공우주 산업에서 발생하는 등 제재 범위가 기존 의류·전자 중심에서 핵심 제조 공급망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
- 전문가들은 UFLPA 집행 강화가 공급망 투명성 제고 및 강제노동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 반면, 일각에서는 제재 대상 기업 지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도 제기



- | | |
|-------|--|
|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 ■ 자료원 | CBP(10.24), International Trade Today(10.31)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수출 통제 (10.28)	H.R.5853 (하) (10.28)	Brian Mast (공)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ECRA)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CRA)를 개정해 위반 시 부과 벌금 한도를 대폭 상향 최대 벌금액 기존 3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인상. 거래금액 기준 대체 상한선 '2배'에서 '4배'로 확대.
무역 관세 (10.28)	S.J.Res.77 (상) (‘25.09.16)	Tim Kaine (민)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 통과
	S.J.Res.81 (상) (‘25.09.18)		〈브라질에서 수입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 통과 상하원 공동 결의로 국가비상사태법 제202조에 따라 대통령이 2025년 7월 30일 행정명령 14323호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결의안 통과
	S.J.Res.88 (상) (‘25.10.07)	Ron Wyden (민)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 통과
원산지 표시 (10.28)	S.3065 (상) (10.28)	Cindy Hyde-Smith (공)	〈원산지 표기법(Let Americans Buy with Explicit Labeling (LABEL)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6년 농산물 마케팅법(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을 개정하여 모든 해산물(야생 어획 또는 양식 여부와 관계없이)에 대해 원산지와 생산방식을 명확하게 라벨링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무역 관세 (10.29)	S.3072 (상) (10.29)	Catherine Cortez Masto (민)	〈커피세 폐지법 (No Coffee Tax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법안은 미국과 정상무역관계(NTR) 유지하고 있는 수입 국가에서 커피 추가 관세 부과 금지 법안
소비자 보호 (10.29)	S.3069 (상) (10.29)	Rick Scott (공)	〈유해한 CCP 제품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Protecting Americans from Harmful CCP Product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개정하여 미국인을 유해한 중국공산당(CCP)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의약품 (10.30)	S.3081 (상) (10.30)	Ted Cruz (공)	<p>〈해외 승인 의약품의 상호 인증 허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승인 의약품·의료기기의 미국 내 상호 승인 절차를 허용하도록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 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개정 미국 내 허가 기간 단축과 혁신 제품 도입 촉진 기대
에너지 (10.30)	S. 3088 (상) (10.30)	John R. Curtis (공)	<p>〈핵융합 첨단 제조 동등법(Fusion Advanced Manufacturing Parity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6년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을 개정하여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를 핵융합 에너지 부품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 45X 세액공제의 확대: 미국 내에서 제조된 핵융합 에너지 부품에 대해 25% 생산 세액공제 추가
인공 지능 (10.31)	H.R.5885 (하) (10.31)	John Moolenaar (공)	<p>〈2025년 국가 인공지능 접근 및 혁신 보장법 GAIN AI Act of 2025 (Guaranteeing Access and Innovation for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인공지능 칩을 우려국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국인이 해당 칩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제공했음을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글로벌 탄소세 (10.31)	H.R.5888 (하) (10.31)	August Pfluger (공)	<p>〈글로벌 탄소세 적용 제한 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이 글로벌 탄소세를 시행하는 유엔 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엔이 부과하는 모든 세금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
핵실험 (10.31)	H.R. 5894 (하) (10.31)	Dina Titus (민)	<p>〈핵실험 중단 및 군비통제 강화 이니셔티브 재개법(Renewing Efforts to Suspend Testing and Reinforce Arms Control Initiatives Now (RESTRAIN)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이 핵무기 폭발 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방위법(Atomic Energy Defense Act)을 개정하는 법안

* 미국 동부 시간 11월 4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u>Trump Negotiating Deal With Ozempic Maker to Sell Some Weight-Loss Drugs for \$149</u> (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협상 중...\$149대에 판매될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등과 비만 치료제 판매가격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TrumpRx를 통해 판매될 한달 분량의 비만 치료제 가격은 \$149 수준이 될 전망
The Washington Post	<u>Administration hints furloughed workers may not be paid after shutdown</u> (계속되는 섯다운...일시 휴직 근로자 급여 보장 안돼)
	트럼프 행정부는 섯다운 기간 중 일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급여가 보장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통보하고 있어. 최근 2차 일시 휴직 통지에 따르면, 1차 통지와 달리 급여 보장 문구가 포함되지 않아
The New York Times	<u>Trump Can Reconsider Permit for Offshore Wind Farm, Judge Rules</u> (연방 판사,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재고 가능해”)
	워싱턴 DC 지법의 Tanya Chutkan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매사추세츠주 사우스코스트 윈드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재고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해
CNN	<u>DOT may close certain parts of the airspace due to air traffic controller shortages</u> (섯다운 여파...하늘길도 막혀)
	션 더피 미 교통부장관은 출근한 관제수 인원이 충분치 않을 시 미국 영공의 일부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혀. 이로 인해 대량의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이어질 전망
USA Today	<u>Is AI coming for your job? Maybe. See which industries are most, least at risk</u> (AI 시대에서 살아 남을 일자리는?)
	미국 국립과학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동안 AI는 전체 일자리의 25%에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도소매무역·금융보험·교육서비스 등은 대체될 전망이나 광업·농어업·행정서비스 등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전망

* 미국 동부 시간 11월 4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39	미국 중·대형 트럭 신규 관세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10월
US25-38	美 무역전쟁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5.10월
US25-37	美 특허의약품 관세 정책 추진 및 제약사별 대응 동향	2025.10월
US25-36	미국 정부의 관세 위반 단속 강화 추세와 향후 전망	2025.09월
US25-35	미국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변화	2025.09월
US25-34	'25년 2분기 美 청정에너지 투자 동향과 정책 환경 영향	2025.09월
US25-33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9월
US25-32	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무역 구조 변화 ('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5.08월
US25-31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30	미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의견수렴 주요 내용	2025.08월
US25-29	美 미소기준(De Minimis) 면세 중단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8월
US25-28	美 정부 『AI 행동계획』 행정명령 발효 -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27	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7월
US25-26	CSIS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분석	2025.07월
US25-25	美 최초 암호화폐 법안(Geniu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7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3 (2025.8.26.)		
코인사-22 (2025.5.13.)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